

# 2분기 민간소비 4년만에 마이너스

### 고물가·고유가 여파 전기대비 0.2% 감소

### 실질 GDP 성장률도 1분기비 1% P ↓

고물가, 고물가, 고유가 등의 여파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올해 2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4년 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교역 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0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실질 GNI는 전분기

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질 GNI 증가율은 작년 2분기 2.0%에서 3분기 1.5%, 4분기 0.2%로 낮아진 뒤 올해 1분기에는 -1.2%까지 떨어졌으나 증가세로 반전됐다. 실질 GNI가 소폭 늘어난 것은 고유가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이 본격적으로 수출가격에 전가되면서 전분기보다 교역조건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8%, 작년 동기 대비로는 4.8% 성장해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속보치와 같았다. 작년 동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1분기 5.8%에서 1%포인트 떨어졌지만, 상반기 성장률은 5.3%로 집계됐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성장률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는 국민총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대비 0.2% 감소해 2004년 2분기(-0.1%)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통신 및 의료보건 서비스 소비가 증가한 반면 가정용 전기기기 등 내구재 소비와 의류 및 신발 등 준내구재 소비는 부진했다.

한은의 정영택 국민소득 팀장은 "물가가 많이 오르고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등으로 소비 여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투자가 감소했으나 기계류 투자가 늘면서 전기 대비 0.9%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재고가 쌓이면서 건물 건설이 부진해 1분기(-1.4%)에 이어 1.0% 감소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소비·투자 등 내수는 0.2% 증가에 그쳤다. 수출은 석유화학제품, 기계 및 전자기기, 운수 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4.3% 증가했다.

한편, 총저축률은 전분기 30.4%에서 31.9%로 상승했다. /연합뉴스

## 김황식 감사원장

###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와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231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74표, 반대 54표, 무효 3표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찬성 175표, 반대 51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가결됐다.

김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 양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두 사람은 다음주에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협의 과정 및 협정 내용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대표로 한 중인들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설거지론' vs '선물론' 격돌

### '지각' 쇠고기 청문회... 류우익·권오규 불출석

### 1면 '생활공감 정책'서 계속

금융위원회는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대신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영세 상인에게 소액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매년 80억원을 배정, 80개 재래시장에서 점포당 최고 300만 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을 적용해 최장 1년 만기로 빌려주며 연체 이자율은 연 20% 이내이다. 재원은 소액서민금융재단이 72억 원, 시장 상인회가 8억원을 부담한다.

국세청은 외환산 근로자이지만 세법상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139만명(중복포함 대상 환급건은 174만5천 건)에게 추세 전 잡자는 세금 711억원을 찾아서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대상은 외환원, 음료품 배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약기 조율사, 화가 등 예술인이나 프로 운동선수, 학원강사 등이다.

국세청은 2005~2007년분 세금을 대상으로 환급 안내문과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환급금은 추세 이전에 은행계좌에 넣어주거나 우체국에서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하철공사 합동으로 2012년까지 총 1조7천900억원을 투입해 '지하역사 공기질 5개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건강에 영향이 큰 석면과 라돈이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연합뉴스

쇠고기국정조사 특위가 5일 개최한 '쇠고기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설거지론'과 '한·미 정상회담 선물론'으로 대변되는 전, 현 정부 책임론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 공방으로 수차례 일정이 지연된 끝에 가까스로 열린 것이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중진)과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참고인) 등 중진 4명과 참고인 12명이 무더기로 불참, 맥빠진 상태로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설거지론'을 부추기기 위해 참여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질문 공세를 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쇠고기 협상을 중단했다는 상향 논리로 전개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12월24일 쇠고기 협상 관련 회의에서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다, 나 때문에 선거가 졌다는데 왜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느냐'고 말했다"며 "선거 패배 때문에 협상을 중단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중진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노 전 대통령이 소회는 있을 수 있었지만 쇠고기 협상 같은 중요 현안을 한·미간의 충분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졌으니 중단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현 정부를 겨냥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4월 1차 협상 두 달 전인 2월 미국 농무부장관 등은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고무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며 "1차 협상 전부터 이 정부의 입장은 정해져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갑 의원은 "사골, 꼬리뼈, 내장 모두 수입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농림부에서도 방침을 정했었는데 이 권관이 들어서자마자 통째로 내렸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얻기 위해 국민 건강을 통째로 던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日 방위백서 4년 연속 '독도 자국 영토' 표기

### 외교부 "즉각 시정해야"... 한·일 갈등 재현될 듯

일본이 '2008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중전 입장을 고수하면서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5일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08년판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

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표현을 기술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4년 연속이다.

방위성은 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중전 내용을 그대로 명기했다.

정부는 이날 방위백서가 일본 각의를 통과하자 즉각 대응했다.

외교통상부는 문태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이 '2008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중전 입장을 고수하면서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5일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08년판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

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표현을 기술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4년 연속이다.

방위성은 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중전 내용을 그대로 명기했다.

정부는 이날 방위백서가 일본 각의를 통과하자 즉각 대응했다.

외교통상부는 문태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영산강 하구 준설 찬반 논란

### 국토해양부 주최 심포지엄

하구둑 건설 이후 수질악화와 생태계 훼손 등이 계속되고 있는 영산강 하구의 퇴적물 준설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 주최로 5일 오후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산강 하구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폭포대 해양수산자원학과 장진호 교수는 "1981년 건설된 하구둑과 이후 각종 연안개발사업으로 영산강 하구에서는 유속감소, 수위상승, 용존산소 감소 현상 등 환경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교수는 "25년 동안 하구면적이 14km에서 12.47km로 축소됐으며 평균수심은 15.34m에

서 13.2m로 낮아져 해수 수용공간이 줄어들고 평균 해수면은 17.9cm나 상승, 해안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준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염된 준설물 처리 과정에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만큼 해수 유통방안이 더 친환경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도 환경정책과 김경수 수질개선담당사무관은 "영산강 하구의 퇴적물 준설을 위해서는 3천600억~1조원의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준설 후 300일후부터는 그 효과도 반감되고 오염된 준설물 처리 과정에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돼 준설은 사실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

## 시설

### 'J프로젝트·새만금' 상생전략 마련하라

새만금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전남의 최대 현안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각종 개발계획이 J프로젝트와 중복돼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다. J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승인까지 늦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정부의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지난 4일 '새만금 간척용 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발표했다. 비농업분야 용지를 70%까지 늘려 24선석 규모의 신항만과 국제공항, 골프장 등을 만들어 '동북아의 두바이'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당초 계획에 없던 국제공항과 신항만 조성까지 포함돼 있다.

새만금개발이 본격화되면 전남의 각종 현안사업은 축소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기능과 사업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만큼 J프로젝트와 광양항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새만금이란 거대한 '암초'에 부딪친 것이다.

새만금개발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2 광역경제권 개발'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광역경제권에는 광주와 전남, 전북이 한 권역에 묶여 있다. 같은 호남경제권에 J프로젝트와 새만금 골프장, 광양항과 새만금 신항, 무안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오히려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를 불러 공멸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새만금개발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 당초 계획에 없던 호남경제권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상생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용역안과 같은 새만금개발 구상으로는 소도만 부추길 뿐이다. 새만금개발에 밀려 J프로젝트와 광양항 등 전남의 현안사업이 '희생' 당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세계의 미술 흐름과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아시아권 비엔날레에서 가장 먼저 개막하는 만큼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광주비엔날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오늘 개막되는 부산비엔날레를 비롯 상하이비엔날레, 싱가포르비엔날레, 요코하마비엔날레 등 아시아권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 최고 비엔날레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비엔날레로 성장하려면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시민 모두가 현대미술의 대항연에 참가해 축제를 즐기고 세계미술의 흐름을 감상하기 바란다.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 맞이에도 정성을 다해 감동을 안겨 주어야 할 것이다.

### 광주비엔날레 관람객에 '감동' 안겨주자

제7회 광주비엔날레가 어제 개막돼 6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비엔날레는 별다른 주제 없이 '연례보고' 형식으로 36개국 작가 126명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정 주제를 내세우지 않는 비엔날레는 또 다른 실험이다.

출발은 산뜻하다. 비엔날레를 찾은 세계 미술전문가와 내외신 기자들은 "광주비엔날레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세계 비엔날레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성공을 예감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는 예술 및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해 온통 축제 분위기다. 주 전시장만 비엔날레 전시관, 시립미술관, 외제미술관, 대인시장, 광주극장 등 5곳에 달한다. 도시 곳곳에서 현대미술의 대항연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의 대표적 미술축제다. 아시아 현대미술을 선도하며

세계의 미술 흐름과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아시아권 비엔날레에서 가장 먼저 개막하는 만큼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광주비엔날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오늘 개막되는 부산비엔날레를 비롯 상하이비엔날레, 싱가포르비엔날레, 요코하마비엔날레 등 아시아권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 최고 비엔날레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비엔날레로 성장하려면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시민 모두가 현대미술의 대항연에 참가해 축제를 즐기고 세계미술의 흐름을 감상하기 바란다.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 맞이에도 정성을 다해 감동을 안겨 주어야 할 것이다.

## '웃기는 전사모'

###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5·18법이 행복 추구권 침해' 헌소 추진

5·18 민주화운동 왜곡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이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전사모 관계자는 "'5·18특별법'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현재 제출시기와 방법을 놓고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5·18'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던 전사모는 헌법소원의 근거로 북한 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5·18 배후설'을 들고 있다. 전사모는 또 5·18을 소재로 한 강물 작가의 만화 '26년'을 원작으로 제작을 준비중

인 영화 '29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5·18관련단체들은 전사모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차라리 헌법소원을 통해 그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5·18 관련 단체들은 지난 5월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방판사와 전사모 회원 등 38명을 광주지검에 고소,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의원 체포동의 요청시 법사위 조사 추진"

### 박주선 의원 발의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법사위에 회부, 법사위에서 15

일 이내에 체포동의요청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국회의장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법사위가 조사를 위해 정부 등에 서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법사위 조사없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독신칭·배달안대))		www.kwangju.co.kr	
편집국내대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부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회 2부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빛日만평

- 김중두



올해는 보름달(?)도 없다